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미국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복귀

지난해 美國의 반도체 메이커들이 85년이후 처음으로 日本 메이커를 제치고 세계반도체 시장점유율 1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데이터퀘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업계는 올해 세계반도체 시장매출의 41.9%를 차지해 41.4%를 점한 일본 반도체업계를 약간의 차이로 추월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 반도체업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 80년부터 하락, 지난 89년에는 38.6%까지 떨어졌으나 90년에는 38.6%로 높아졌고 91년에는 38.4%로 소폭 하락했다가 92년에 41.5%로 다시 높아지면서 93년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일본반도체업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 8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88년에 51.0%로 정점에 달했으나 89년부터 하락세로 반전, 90년에 46.3%, 91년 46.4%, 92년 42.3% 그리고 올해는 41.4%로 떨어졌다.

이같이 미국 반도체업계가 옛 명성을 회복한 것은 일본 반도체업계가 일본경기침체, 외국기업과의 자국내 경쟁과열 및 엔화강세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반면 미국반도체업계는 인텔사의 주도로 봄을 일으키고 있는 PC시장 침투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체별로는 인텔사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최대 반도체 공급업체의 자리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는 128억 5,000 만달러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이면서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으며 모토로라사도 도시바를 제치고 3위로 부상,

미국업계의 시장점유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면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미국, 일본 등 제외)의 경우 80년에는 그비중이 0.2%에 불과했던 것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90년 3.9%, 91년 4.6%, 92년 6.0% 그리고 93년에는 7.4%로 높아졌다.

반면 유럽의 경우 지난 80년 세계수요의 15.2%를 차지했던 것이 90년에 11.2%, 91년 10.6%, 92년 10.2% 그리고 93년에는 9.3% 떨어졌다.

2. 미국, 첨단기술 관민합동 개발

미국이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노려 관민합동으로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산업진흥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정부와 개발의 비용 및 기간 축소를 바라는 민간기업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자금지원·기술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민간과의 협력은 상무부·국방부·환경보호국·에너지부 등 몇개 부처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실시되고 있다. 상무부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개발계획(ATP)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는 바이오에서 전자·기계분야의 29개 하이테크 항목을 선정, 주로 중소벤처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개발이 포함돼 있다. 정부 지원액은 94년도에만 약 2억달로로 예정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NIST라는 중소기업의 제조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5개 제조기술센터를 개설해 놓고

있는데 96년도까지 이를 179개소로 대폭 증강 키로 했다.

국방부에선 고등 기술 계획국(ARPA, 舊 ARPA)을 중심으로 군사기술에서 민간기술로의 전환, 또는 군민 양용 기술(듀얼유스 테크 놀리지)의 개발을 보잉 및 제너럴 모터즈(GM) 등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자동차분야에선 3대 메이커(빅3)와 갤런더 83마일의 高燃費車의 공동개발에 몇억달러를 지원하거나 빅3가 구성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전지의 개발공동체 USABC가 알곤누 국립연구소의 협력업체를 도입하는 것도 이같은 관민공동체제의 일환이 것이다. 조선기술 분야에선 일본기업을 참여시키고 있는 예도 있다.

전기자동차의 실용화를 위한 전지개발은 환경보호국의 지원을 얻은 것으로 정부기관의 횡단적인 민간협력 자세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ATP 및 전기자동차용 전지 등 많은 과제는 개발에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지만 민간지원으로 소극적이었던 이전 정부에 비하면 미국의 기술경쟁력회복에 대한 의욕이 왕성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3. 미국, 동아시아·중남미 시장개방 압력 강화

미국은 내년에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펴 나가기로 하고 시장잠재력이 큰 東아시아와 中南美지역국가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프리 가던 美상무부 무역담당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 미국의 경제성장중 58% 상당이 수출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면서 94년에는 고용확대를 위해 수출부문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가던차관은 이를 위해 경기가 부진한 日本과 유럽국가들의 경기부양책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선진교역국에 대한 수출부진을 만화하

는 차원에서 시장잠재력이 큰 東아시아와 中南美국가의 시장개방문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이들지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美國과 日本은 일본측의 자동차 및 부품시장 개방문제를 놓고 심각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던차관은 내년 2월11일 워싱턴에서 열릴 美·日정상회담 이전까지 양국간 통상현안을 해결키 위해 내년 1월중 집중적인 협상을 벌 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일간 자동차교역문제가 내년 정상회담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다만 이 문제가 현재 진행중인 포괄경제협의의 핵심사항이라고 밝혔다.

가던차관은 이어 연간 500억달러에 달하는 美國의 對日무역수지적자증 3분의 2가 자동차교역과 관련된 것이며 일본의 자동차시장 개방조치는 미국의 철강업계 등 자동차와 연관된 산업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는 내수경기부양책과 더불어 세계경기회복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시장개방은 내수를 부추겨 결국 일본경제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美 HP社, 유럽마케팅 창구일원화

미국의 컴퓨터그룹인 휴렛 팩커드(HP)사가 단일 범유럽 마케팅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유럽단일 시장의 출현과 신제품개발 및 수요패턴의 변화에 대처키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파리, 런던 및 기타 도시에 산재한 HP사의 국별 마케팅회사는 독립적인 법적 형태를 취하지 않고 범유럽 법인체인 HP유럽의 지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P사는 이같은 체제개편의 1단계조치로 최근 국별사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제네바소재 지역총괄본부로 부터 유럽거점이 될 네덜란드 소재 지주회사로 이전시켰다.

앞으로 국별지사는 해당지역내 소매상 및 최종소비자와 최일선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주문처리, 대금청구 및 지급 등 후방지원 활동은 총괄본부로 집중된다.

5. 東亞, UR타결로 큰 혜택

7년여간의 협상끝에 타결된 UR협상은 미국, EC, 일본 등 선진공업국들에 의해 주도됐지만 협상타결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WSJ)紙가 분석, 보도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紙는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들은 뒷전에 밀려나 선진국들의 협상결과만을 강요받고 이에 대한 강한 불만도 제기했지만 협상타결에 따른 혜택은 이를 개도국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경제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UR협상이 실패했다면 세계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개도국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R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미국, EC는 지역내 경제블록에 의존하고 일본도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유대강화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이 가능하지만 인도, 모리셔스, 자마이카 등 강력한 경제블록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UR협상은 철강, 제지, 가구를 비롯한 공산품에 관한 명문화된 관세인하 규정을 통해 개도국들의 선진국시장 진출에 관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는 동아시아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던 줄리어스 브리티쉬항공 연구원과 리차드 브라운 前IMF 수석연구원의 공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육성,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공업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제조업부문에 대한 의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제조업보다는 주문생산,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부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부문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대거 이전됨에 따라 현재 미국이 15%, 독일이 32%를 기록하고 있는 제조부문 고용비율은 앞으로 30년내에 10%선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도국지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산품에 관한 관세인하는 개도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 日, 94년에는 電子매출 증가

日本전자업계의 '94년 생산액은 21조 890억 엔으로 금년에 비해 0.7% 증가, 3년만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일본전자공업협회(EIAJ)가 전망했다.

이는 관련업체들이 엔화강세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시설을 대폭 이전시켜 일본내 전자제품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으나 일부 신제품의 매출증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EIAJ측은 제품별로는 액정표시소자(LCD)의 생산량이 수요급증으로 내년에 34%나 증가,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이는 반면 변환기의 경우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생산량이 12%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야별로는 소비자 전자제품의 생산액은 내년에 3조 172억엔으로 3.3% 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나 와이드 스크린TV, 디지털 컴팩트 카세트(DCC), 미니디스크(MD)등 신제품의 경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산업용 전자장비의 생산액은 9조 860억

엔으로 0.6%, 전자부품생산액은 8조 57억 엔으로 2.6%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산업용 전자장비 중에서는 이동통신 장비가 생산증가를 주도하는데 비해 전자부품 분야에서는 PC시장 확대에 따른 LCD 및 반도체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EIAJ는 예측 했다.

한편 전자분야의 올해 생산액은 세계 경기 침체와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9%나 감소한 20조 940억 엔 수준에 그칠 것으로 EIAJ측은 추산했다.

7. 일본, 520여항목 行政規制완화

일본은 520여개 항목의 행정규제완화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총무청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허가 폐지 등이 121개 항목, 신고 및 보고 의무를 감소시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약400개 항목에 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앞으로 총무청을 통해 각 부처와 조정하여 항목의 규제완화조치를 포함시킨 9월의 긴급경제대책에 이어 제2차 규제완화책을 정식 결정할 방침이다.

인허가 수속을 폐지, 자유화하는 것은 △유산균 음료의 자동판매기 구조 승인(후생성) △삼림조합 監査士, 수산업협동조합 감사사의 자격승인(농수성) △無線 종사자의 양성에 사용되는 교과서의 인정(우정성) 등 25개 항목이다. 이밖에 인허가를 신고제로 하거나 규제 대상을 축소하는 ‘완화’가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엠포시 채권의 환류제한을 외국의 공공발행체에 대해 철폐하는 것 등 46개 항목이다. 나머지는 인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조치가 대부분이다.

신고 및 보고와 관련해선 폐지외에 회수를 축소하거나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의 수를 가능한 한 감소시키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본정부는 당초 연내 제2차 규제완화책을

내놓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치개혁관련법안 및 쌀의 부분개방을 둘러싼 정국의 혼란, 내년도 예산 편성의 지연 등에 따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부규제 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가 작성한 규제완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정부규제가 기업가 정신의 저해 및 사업자에 의한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호소카와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인 ‘경제개혁연구회’의 중간보고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는 이같은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서 처음으로 정부규제의 원칙적인 철폐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참여규제에 대해선 수급동향에 따라 행정당국이 참여 적부를 판단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격규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라도 일률적인 가격설정을 회피하고 최고가격제를 채용하는 것 등으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규제를 철폐하면 시장이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선 “규제를 철폐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쟁규칙으로 시장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시장참여 및 가격,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지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8. 일본, 전자부품 신규사업 러시

일본 關西지역의 대형 전자부품메이커들이 국내 산업공동화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전개하거나 강화하고 있다고 電波新聞이 보도했다. 또한 村田製作所는 지난 1일 기구개편을 단행, 신규사업개발본부를 신설했다. 이 본부는 자사에 적합한 신규사업들을 검토, 경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롬은 멀티미디어시대에 대응, 미국과 일본에서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일본전자부품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키로 했다.

호시덴도 멀티미디어용 음성입력소자와 액정분야에 주력하는 외에 백색가전분야의 시장도 적극 개척키로 했다.

교세라는 STN컬러액정디스플레이를 퍼스컴용으로 본격 공급하는 한편 230MB제품을 내년봄 발매, 광자기디스크사업을 개척할 계획이다.

세계에서 통용되는 상품제작을 사업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松下電子部品은 이의 일환으로 공해제거장치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에콜러지(지구환경)·에크노미(생산활동)의 조화를 실현할 대표적인 제품으로 95년도에 상품화될 예정이다.

지난 10일엔 멀티미디어용 스피커시스템도 출하, 멀티미디어사업에 대한 의욕을 과시하기도 했다. 전용앰프를 탑재한 이 시스템은 멀티미디어에 대응, 고음질을 전달할 수 있고 퍼스컴에 대한 입력도 가능하게 특징이다.

村田製作所는 모듈을 중심으로 한 신규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신규사업개발본부를 野洲사업소내에 설치했다. 여기엔 통신인터페이스·모듈, 다충사업, 센서모듈 등 추진본부 3개와 복합기능상품개발 1·2부등을 두어 유망한 신규사업을 개척키로 했다.

센서·기능회로·세라믹다층등 각 모듈과 비소반도체용용제품등 고부가가치부품, 모듈사업을 확대하겠다는게 이 회사의 신규사업구상이다.

롬은 멀티미디어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美연구개발자회사 룸 리서치 코퍼레이션의 3번째 연구거점을 서니펠에 설치키로 했다. 일본내에선 지난달 TV·VCR관련 반도체개발을 담당할 영상LSI상품개발부에 영상·음성·정보등 3개 그룹을 신설, 멀티미디어기기용 LSI개

발을 추진중에 있다.

이 회사는 일반전자부품에서도 실장코스트의 샥감과 고밀도실장화에 대응한 저항기·콘덴서 칩부품의 복합화와 다양화를 도모하는 한편 프린트헤드의 고속·경량·소형화를 추진함으로써 홈FAX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호시덴도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용 스피커, 마이크로폰의 음성입출력소자, 액정디스플레이 등의 공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액정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西神공장'을 증축한데 이어 액정조립공장인 '米子공장'도 완공, 이달초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주택설비·백색가전분야는 전체 매출의 10%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와 관련된 제품을 적극 출하키로 했다.

교세라는 9.4인치 대형STN 컬러액정디스플레이의 공급체제를 정비, 퍼스컴용으로 본격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정보·단말기 등의 OA용, 의료기·POS 등의 산업용, OHP용 등이 자사 액정디스플레이의 주력 수요처라고 밝혔다.

광자기디스크의 경우 신규적인 230MB 3.5인치 광자기디스크만해서 월산 10만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9. 유럽半導體업체들 經營호전

유럽 반도체메이커들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퍼스컴생산이 늘고 있는데 디지털셀룰러(GSM방식)전화기를 포함한 이동통신기기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년중 유럽반도체메이커들의 매출신장률은 두자리 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줄지의 반도체업체인 필립스는 지난 1~9월중 부품·반도체부문에서 50억길드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년동기비 11%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 회사는 전자부품과 반도체 매출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반도체가 이 두 부문의 매출액 증대에 크게 공헌한 것만은 사실이다.

지멘스도 지난 9월까지의 반도체 매출액을 전년동기비 14% 늘어난 21억마르크로 집계했다. 이 회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반도체수요가 호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합작회사인 SGS톰슨社는 세계시장에서의 금년중 자사반도체 매출액이 전년비 33% 늘 것이라고 장담했다. 파스칼 피스토리오사장은 지난달 파리에서 열린 전자부품전 ‘컴포닉’에 참석, 이같이 전하고 미국과 극동지역은 큰폭의 매출 호조, 유럽은 약간 증가로 분석했다.

지난 1·4분기중 3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英GEC프레쉬 세미컨덕터즈(GPS)도 전체 매출의 28%를 점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시장이 호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군수·업무용기기용은 수요가 약간 감소한 반면 컴퓨터·통신기기용은 대폭 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美메이커들도 유럽의 퍼스컴증산에 힘입어 이 지역에서의 장사가 잘 되고 있다.

모토롤라는 11월 현재 對유럽매출액이 전년비 25% 늘었으며 내년에도 약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처음으로 컴포닉에 참가한 IBM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도 이 전시회에서의 수주가 많아 프랑스·독일공장에서 생산증강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유럽 반도체메이커들은 이같은 수요호조 이유로 퍼스컴·GSM단말기의 생산증대를 꼽았다.

10. EC, 美환경규제법 GATT에 제소

EC가 美국의 환경관리법 등 3개법률이 수

입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이를 제소, GATT가 94년초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C가 GATT에 제소한 내용은 승용차 연료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별 평균 연료경제기준(CAFE)과 연료다소비세 및 사치성 승용차세 등 3개로 대형고급승용차 수출에 경쟁력이 있는 EC자동차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조치들이다.

EC측은 미국내 자동차시장점유율이 4%에 불과한 EC자동차업계가 미행정부측이 이 3가지조치로 거둔 연간 세금 및 벌금총 90%에 상당하는 5억달러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조치들이 EC에 대한 차별적인 수입규제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행정부측은 이들 조치가 외국산자동차는 물론 미국산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을 뿐 아니라 EC측이 그간 과소평가한 일본고급차가 미국시장에서 급부상하면서 미국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자 엉뚱하게 미국 법률문제를 들추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GATT에 제소되어 있는 3가지 조치중 CAFE벌금은 연비평균이 갤론당 27.5마일에 못미치는 자동차메이커에 부과되는데 93년형 모델 가운데 이 벌금이 부과된 메이커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및 볼보 등 유럽 3개사뿐이었다.

또 연비가 갤론당 22.5마일에 못미치는 차량에 부과되는 연료다소비세의 경우도 46개차종에 부과됐는데 이중 42개차종이 유럽산으로 나타났으며 3만달러 이상인 차종에 부과되는 사치성 승용차세도 EC산 차량에 불리한 세목으로 꼽히고 있다.